

#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서울시, 서울 각 구청, 보육 담당부서

발 신: 공공노조 보육분과, 진보네트워킹센터, 진보신당 서울시당

## 제 목: 서울시 신임 구청장에 대한 서울형 어린이집 IPTV 정책 철회 요구 운동 선포식 및 부모 소송 계획 발표

날 짜 : 2010년 6월 9일(월) 오전11시부터 취재의뢰

문 의 : 심선혜 분과장 (공공노조 보육분과 / 010-9688-4996)

장여경 활동가 (진보네트워킹센터 / 019-339-2599)

김상철 정책국장 (진보신당 서울시당 / 010-3911-9679)

강상구 위원장 (진보신당 구로당원협의회 / 010-6438-7772)

1.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서울형 어린이집’에 SK브로드밴드의 ‘IPTV’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중용해 왔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실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이를 인터넷으로 중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각 구청에 IPTV 설치 실적을 사실상 강요해 왔고, 구청은 다시 관할 서울형 어린이집에 IPTV의 설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2. 그러나 아동과 교사의 생활 모습을 고해상도로 촬영하고 음성도 함께 녹음하여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것은 정보인권 침해입니다. 보육교사의 경우 형식적인 동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고용관계상 취약한 위치에 있는 보육교사는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지난 5월 4일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3. 무엇보다 서울형 어린이집 IPTV는 아동의 신체적 모습과 더불어 이름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대화내용을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면서, 아동과 그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는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도록 한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4. 9일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반대하는 보육교사 부모들이 제 단체들과 함께 「서울형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제단체 모임」을 결성하고 그 첫 활동으로 구로구청 및 신임 구청장에게 위법한 IPTV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모임은 향후 서울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로 요구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할 방침입니다. 위 모임과 부모 소송인단은 6.2 지방선거로 새로 구성된 서울시와 각 구 의회에도 감사를 청구하여, 서울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특정한 IPTV 업체를 지정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도 투명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5.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서울시 신임 구청장에 대한 IPTV 정책 철회 요구 운동 선포식 및 부모 소송 계획 발표 기자회견

- ◇ 일시 : 2010년 6월 9일(수), 오전 11시
- ◇ 장소 : 서울 구로구청 앞
- ◇ 주최 : 공공노조 보육분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서울시당
- ◇ 발언 : 심선혜 분과장(공공노조 보육분과/교사), 강상구 위원장(진보신당 구로당원협의회/부모) 외 구로구 거주 부모,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최은희(진보신당서울시당 부위원장), 김상철 정책국장(진보신당 서울시당)
- ◇ 기자회견 후 어린이집 IPTV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서류를 구청에 접수하였습니다.

※ IPTV란 :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정보 서비스를 TV 수상기(가정)와 인터넷(직장) 및 핸드폰(이동중)으로 제공하는 융합서비스. 현재 KT의 메가TV, SK브로드밴드의 브로드&TV, 그리고 LG데이콤의 마이LGtv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서울형 어린이집이란 :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중심이었던 공보육 강화정책을 기존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인증제와 인센티브 제공 정책으로 전환한 제도

※ 별첨 자료 :

1. 신임 구청장에 대한 요구 (민원 서류)
2. SK 브로드밴드 대상 부모 소송 개요와 제안
3. 서울시의 IPTV 시스템 설치 경과와 특성
4. 기자회견문

---

## 서울형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제단체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공공노조 보육분회, 진보신당서울시당, 부모모임)

---

일자: 2010년 6월 9일

발신: 서울형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 제단체 모임

수신: 신임 구로구청장(참조: 보육정책 담당부서)

담당: 강상구 (부모 대표, 010-6438-7772)

제목: 관내 어린이집 IPTV설치에 대한 질의의 건

---

1. 서울형 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 제단체 모임(이하 모임)은 지난해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서울형 어린이집 IPTV의 설치 중단 및 기설치된 장비의 철거를 요구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입니다.
2. 모임에서는 지난해부터 서울시의 IPTV 설치사업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문제점 뿐 아니라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특히 아동의 보육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임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에 IPTV 설치 중단을 촉구하고 해당 사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습니다.
3. 특히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주체인 아동과 그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아동의 모습을 촬영하고 음성을 녹취한 후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업자의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를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자치구를 통해 일선 보육시설에도 사업 수용을 강요해 왔습니다.
4. 모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임은 해당 사업의 위법한 개인정보 전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사업의 추진과 사업자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하여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5. 모임은 서울형 어린이집 IPTV 사업에 대하여 귀 구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정책적 방향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묻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

\* 회신희망기일: 6월 16일

\* 질의에 대한 문의 및 회신은 위 담당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로 이어짐-

[첨부]

(1) 귀 구에 현재 IPTV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가 예정된 보육시설의 수는 얼마인지 공개하여 주십시오.

(1-1) 위 수치가 귀 구가 관할하고 있는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 전체 규모와 비교하였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공개하여 주십시오.

(2) 귀 구가 어린이집 IPTV 관련, 생산하였거나 발신한 공식/비공식 문서(정보통신망 포함) 일체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2-1) 귀 구가 어린이집 IPTV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이른 자료 및 회의록을 모두 포함하여 주십시오.

(2-2) 귀 구가 서울시와 관내 어린이집에 발신한 문서를 모두 포함하여 주십시오.

(2-3) IPTV 설치를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서울형 어린이집의 의무 및 평가사항으로 간주하는 문서가 있을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 주십시오.

(2-4) IPTV의 관리 감독과 관련한 지침이나 규정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주십시오.

(3) 어린이집 IPTV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부모의 사전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하고 인터넷에 전송하게 된 사태와 관련하여 귀 구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3-1) IPTV 사업의 위법성 주장에 대한 귀 구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3-2) IPTV로 인한 보육교사와 아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귀 구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3-3) 어린이집에서 녹화 및 녹취된 정보의 보관 기간, 보관 장소, 관리자 등 관내 어린이집의 IPTV 운용실태에 대해 귀 구가 민간사업자와 독립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실태를 밝혀 주십시오.

(4) 신임구청장 당선 이후 어린이집 IPTV 설치사업 관련한 귀 구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밝혀 주십시오.

(4-1) 위법적인 어린이집 IPTV 사업 중단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끝]

## << 부모 소송 개요와 제안 >>

### ■ 소송 제안

-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어린이집”은 보육실에 CCTV를 달아 IPTV로 중계합니다. 어린이집 모습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니 모든 부모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 하지만 우리는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교사 대비 아동 수를 줄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공공 지원 속에서 보육 환경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인권침해의 방조자이자 협조자로 자라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 어린이집 IPTV는 보육교사를 상시 감시하고, 아이의 이름과 신체적 특성 등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반인권 정책입니다. 실질적인 보육의 질 향상이나 안심 보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서울시는 공공 정책의 이름으로 SK브로드밴드라는 특정업체의 수익 창출에 부모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IPTV로 아이들을 촬영하고 인터넷으로 그 영상을 전송하기 전에 정보주체인 아이들과 그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 보육교사들과 정당·사회단체들은 어린이집 IPTV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SK브로드밴드가 현행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동의권과 거부권을 완전 무시한 데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우리처럼 어린이집 IPTV가 자녀를 촬영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데 동의하지 않고, 이에 대한 소송을 원하는 부모들이 더 계시다면 소송인단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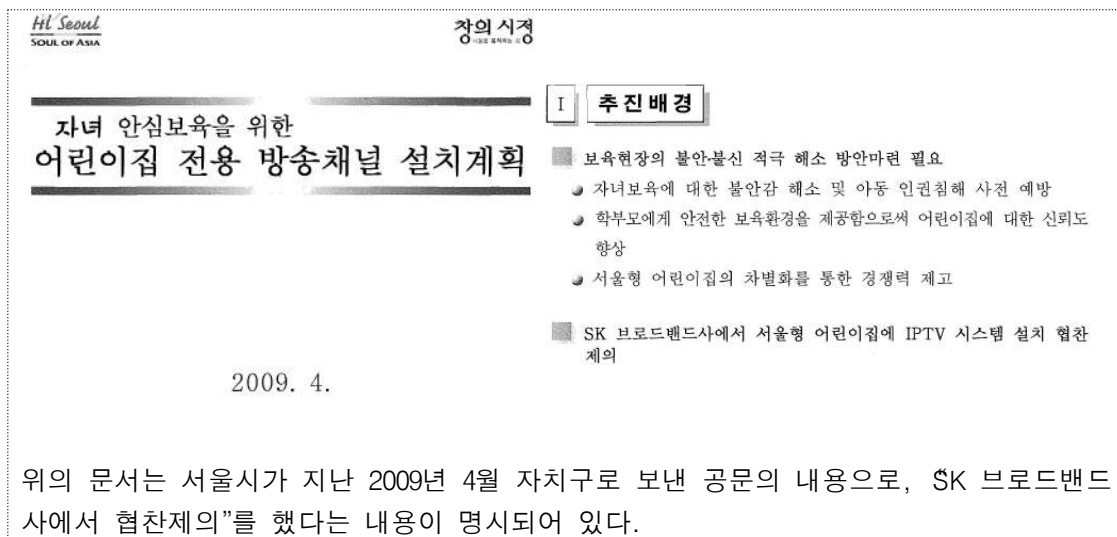
### ■ 소송 개요

- 신청자격 : IPTV가 도입되었거나 도입될 예정인 서울형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
- 소송대상 : SK브로드밴드
- 소송절차 : 민사소송 (가처분은 검토후 진행)
- 소송참가 및 자세한 안내 : 온라인 신청 <http://iptv.jinbo.net>

# << 서울시의 IPTV 시스템 설치 경과와 특성 >>

## ■ IPTV는 서울시의 ‘안심보육’ 정책으로 도입되어 확산중

- 2010.3.19.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에 ‘안심보육’ 서비스의 일환으로 공급된 IPTV는 총 386개소에 달하며, 이는 전체 서울형 어린이집 1,543개소의 25%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작년 11월말 현재 IPTV 설치를 희망하여 설치하고자 신청한 어린이집은 725개소로 서울형 어린이집의 47% 수준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IPTV설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본래 본 사업이 시작된 배경은 오세훈 시장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공보육 강화정책을 기존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인증제와 인센티브 제공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에서 기인한다.
- 작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서울형 어린이집의 IPTV는 SK 브로드밴드사의 ‘서울형 어린이집 IPTV 시스템 설치 협찬’ 제의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는 기존의 CCTV설치 사업이 공공기관의 주도로 기획되고 추진되었다는 면에서 보면, 사실상 민간기업의 사업제안을 수용했다는 측면에서 특기할 만한 하다.



- 이와 같은 서울시의 IPTV도입사업은 크게 ① 자율이 아니라 강제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는 점 ② 특수 민간사업자의 시장내 독점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점 ③ 국공립어린이, 가난한 자치구에만 편중되게 설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 ■ 자율이 아닌 강제로 설치

- 서울시는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보육현장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과 불신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IPTV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으로 교사와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동의하는 어린이집에만 설치하는 ‘자율 설치’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서울시, 어린이집 전용 방송채널 설치계획, 2009.4.).
- 문제는 명목적인 자율설치 이면에 사실상 서울시가 행정력을 바탕으로 자치구에 IPTV설치를 강요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자치구에 IPTV설치 사업과 관련된 공문을 최소한 8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서울시가 자치구에 발송한 IPTV 관련 공문 목록

2009년 4월 20일	어린이집 전용 방송채널(IPTV 시스템) 설치 신청시설 제출
2009년 6월 25일	어린이집 전용 방송채널(IPTV) 설치신청 적극 독려
2009년 7월 16일	어린이집 전용 방송채널(IPTV) 신청현황 통보 및 설치신청 적극 독려
2009년 9월 17일	어린이집 전용 방송채널(IPTV) 설치신청 적극 독려
2009년 9월 30일	IPTV 설치신청 관련 보육교사 동의강요 자제요청
2009년 10월 12일	IPTV 방송서비스 추진 관련사항 협조
2009년 11월 24일	어린이집 IPTV 설치에 따른 협조
2009년 12월 15일	서울형어린이집 3단계 공인시설 등에 대한 IPTV 설치 적극 홍보

- 서울시는 2009년 4월 20일 공문(보육담당관-5390호)을 통해 “어린이집 전용 방송채널(IPTV 시스템)을 무료로 설치·지원”한다고 알리면서 “각 자치구에서는 별첨 양식에 의거”하여 설치를 희망한 시설의 명단을 2009.4.30까지 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서울시는 이 공문에 함께 첨부된 「어린이집 방송채널 설치계획」에서 “추진배경”으로 △보육현장의 불안·불신 적극 해소 방안마련 필요와 더불어 △SK 브로드밴드사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에 IPTV 시스템 설치를 협찬 제의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이 계획서는 설치 절차가 서울시→자치구→어린이집의 위계관계 하에 이루어짐을 적시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 시에 설치결과를 보고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시에서 이날 공문 후 이후 수차례에 걸친 공문 발신 때마다 각 보육시설에서 작성해야 할 「어린이집 IPTV 설치 신청서」와 「IPTV 시스템 설치 동의서」 양식을 지정하여 하달하였다.
- 2009년 6월 25일 공문(보육담당관-8969호)에서는 “미신청 자치구 및 신청이 저조한 자치구(종로, 용산, 도봉,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를 명시하여 IPTV 설치·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그 접수 결과를 수시로 시에 제출할 것을 요

구하였으며, 2009년 7월 16일 공문(보육담당관-10090호)에서도 “미신청 자치구 및 신청이 저조한 자치구(도봉, 양천, 구로)”를 명시하여 IPTV 설치·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그 접수 결과를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2009년 9월 17일 공문(보육담당관-13476호)에서는 자치구별 IPTV 설치 신청현황을 일람하여 자치구간에 실적 경쟁을 유도하였으며, 이처럼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하여 IPTV 설치를 사실상 종용함에 따라 교사와 시설장의 동의하에 ‘자율 설치’한다는 원칙은 유명무실해졌다. 보육교사에게 동의를 강요한다는 민원도 제기되기 시작하자 서울시는 2009년 9월 30일 공문(보육담당관-14175호)에서는 보육교사 동의강요 자제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 이후로도 2009년 12월 15일 공문(보육담당관-19022호) 등에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시설에 대해 2009.12월말까지 IPTV 설치를 적극 홍보하도록 자치구에 촉구하고 자치구별 IPTV 설치현황을 다시한번 일람하고 있다.

- 특히 서울시가 11월 24일자로 자치구에 보낸 ‘어린이집 IPTV 설치에 따른 협조공문’(보육담당관-17684호)은 서울시가 밝힌 자율설치의 원칙과 명백히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공문에는 “자치구별 2009년 12월 IPTV 설치신청 실적은 2010년도 인센티브사업에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로 통보하였다. 사실상 서울시의 특별재정지원을 매개로 자치구의 사업추진을 강제한 것이다.

**제목 어린이집 IPTV 설치에 따른 협조**

1. 우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어린이집」의 각종 공지사항, 가정통신문, 자녀들의 보육모습 등을 가정이나 직장에서 TV와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IPTV 방송시스템을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2. 일부 자치구의 IPTV 설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설치신청이 저조한 바 각 자치구에서는 보육시설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구별 2009년 12월 IPTV 설치신청 실적은 2010년도 인센티브사업에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설치목표 : 1000개소(자치구별 평균 40개소)

나. 신청현황 : 696개소(2009.11월 현재)

- 이처럼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IPTV 시스템의 설치를 계속 독려하고 재촉하였을 뿐 아니라 개별 시설에 대한 구체적 지시 사항도 하달하였다. 2009년 10월 12일 공문(보육담당관-14789호)에서는 각 보육시설에서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이용아동의 가정에 IPTV 방송채널 운영 안내문 발송을 지시하고 그 안내문 양식을 첨부하였으며, ▲시설의 IPTV 홈페이지 주소를 e-보육 및 서울시 보육포털사이트에 링크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 서울시가 IPTV의 설치를 사실상 강제하였다는 사실은, 실제로 해당 공문의 시행 이후 설치신청 접수가 비약적으로 늘었다는 사실에서 확인될 수 있다. 일례



로 강서구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한달 동안만, 관내 10개소의 어린이집이 IPTV 설치를 신청했다. 2010년 현재까지 설치 시설수가 39개에 불과했던 지역에서 서울시의 인센티브 사업 통보 이후에 10개소의 시설이 설치 신청을 희망했다는 것은 사실상 서울시가 자치구에 IPTV설치를 강요했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 이로 인하여 자치구의 보육시설에 대한 IPTV 설치 중용도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 최근 종로구청의 경우 <어린이집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표(총100점)>에서 “IPTV 설치·운영실적”에 25점을 배정하기도 하였다. 어린이집 입장에서 사실상 IPTV 설치가 필수적인 조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

(붙임1)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표(어린이집)**

평가분야	세부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미흡	보통	우수
		100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 37점	추진의 건강검진 실시 - 건강검진아동수/시설 전체 아동수	10	- 80%이상 : 10점 - 60%이상 : 7점 - 50%이상 : 5점 - 50%미만 : 3점		
		3	- 3회 이상 : 3점 - 2회 : 2점 - 1회 : 1점		
	15	- 우수사례 선정 및 전파			
	10	- 공동구매 참여실적	- 참여시설 : 10점 - 미참여시설 : 0점		
	2	- 보육포털시스템 내 어린이집 상세정보제공 (최신정보 업데이트 등)	하위 20% (10점)    중간 50% (1.5점)    상위 30% (2점)		
	3	- 시스템 내 어린이집 사진 및 동영상제공	하위 20% (10점)    중간 50% (1.5점)    상위 30% (3점)		
	2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별시설 정보 입력 실적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어린이집운영」 메뉴 중 '설치운영관리', 항목 입력	- 입력 : 2점 - 미입력 : 0점		
5	자율장학 추진실적 ① 교육(멘토) 참석 여부 (2점) ② 자율장학 관련업무 기한내 이행여부 (3점) (그룹구성 및 멘토선정,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① 모두참석(2점) 참석율 70%이상(1점) 70% 미만(0점) ② 기한내 제출 100%(3점) 제출율 70% 이상(2점) 70% 미만(1점)			
보육환경 개선 25점	IPTV 설치·운영실적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시설 대비 IPTV 설치 실적	25	- 설치완료 운영중 : 25 - 계약완료 : 10 - 설치를 위한 노력시설 : 2점		
사후관리 35점	서울형어린이집 점검결과 우수시설	10	- 우수시설 30% : 10점 - 중간시설 50% : 5점 - 하위시설 20% : 0점		
	회계관리시스템연계 결제카드 사용실적 - 보육아동 1인당 클린카드 사용금액	20	- 1위 : 20점 * 1위 동안 0.5점 차이		
	서울형어린이집 및 보육사업 홍보실적	5	1회 (1점)    2회 (3점)    3회이상 (5점)		
맞춤형 보육실시 3점	보육포털 맞춤보육 제공실적	3	하위 20% (1점)    중간 50% (2점)    상위 30% (3점)		

## ■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기나?

- 더욱 심각한 것은, 그렇게 취득되는 개인정보를 서울시나 자치구, 하물며 어린이집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민간회사에서 저장, 관리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보육담당관실은 진보신당 서울시당과의 통화에서 “서울시에서 해당 녹화정보를 관리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민간기업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근시안적인 태도임과 동시에 무책임한 생각이다.
- 특히 이번 사업이 보편적인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SK브로드밴드라는 경쟁시장 내의 특수사업자에 의해 제안되고 실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어린이집 IPTV운영이나 정보관리에 대하여 어떤 규정도 마련해놓지 않았다. 고해상도의 영상과 오디오를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IPTV의 특성상 원아들과 보육교사의 얼굴, 이름, 신체적 특징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간사업자에 의해 수집 및 처리되는 데도 서울시는 이에 대한 뚜렷한 관리규정 없이 민간사업자의 처분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사업자가 마음만 먹으면 해당 녹화정보를 사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해도 무방한 것이다.
- 애초 서울형 어린이집을 도입하면서 서울시가 내세웠던 명분은 서울시가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내용들은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고 생색만 내겠다는 것은 서울시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힘들다.

## ■ 국공립어린이집, 돈없는 자치구에만 IPTV설치

- IPTV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리감독권한이 미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사실상 강제로 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영등포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어린이집에 하달한 공문(09-05-06 13:40)에는 “국공립은 다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4. 각 자치구에서는 별첨 양식에 의거 시설장과 보육교사 전원이 동의한 시설의 설치 희망신청서를 2009. 5. 11까지 가정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에서 2009.4.30일까지 제출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아직 한군데도 신청 한곳이 없어요 국공립은 다 신청 하여야 한다는군요.

- 그 결과 국공립보육시설의 IPTV 신청률은 46.3%에 달하는데 민간보육시설은 10%에 불과하다. 서울형 어린이집의 취지는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결국 국공립보육시설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 또 자치구별로 IPTV의 보급 불균형이 나타난다. 실제로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작년부터 시기별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어느 자치구는 급격하게 신청개소가 늘어나는데, 어느 자치구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전체 어린이집 현황 및 IPTV 신청시설 현황

(2009.12. 단위: 개소)

자치구별	전체 보육시설					IPTV 신청시설				
	계	국공립	민간	가정	기타	계	국공립	민간	가정	기타
총 계	<b>5,642</b>	622	2,298	2,354	368	<b>725</b>	288	241	183	13
구 로	<b>286</b>	28	112	130	16	<b>97</b>	23	42	28	4
금 천	<b>208</b>	14	93	75	26	<b>80</b>	11	32	35	2
성 북	<b>298</b>	27	118	124	29	<b>59</b>	5	23	31	
중 랑	<b>240</b>	24	131	81	4	<b>58</b>	22	22	13	1
노 원	<b>525</b>	28	95	385	17	<b>45</b>	25	5	14	1
동 작	<b>189</b>	29	79	72	9	<b>43</b>	27	11	4	1
강 북	<b>197</b>	23	97	69	8	<b>42</b>	12	24	4	2
강 서	<b>347</b>	34	145	158	10	<b>35</b>	26	6	3	
은 평	<b>296</b>	18	186	74	18	<b>32</b>	12	16	3	1
성 동	<b>145</b>	32	66	41	6	<b>31</b>	23	5	3	
관 악	<b>273</b>	33	107	106	27	<b>30</b>	4	14	12	
서대문	<b>174</b>	24	78	65	7	<b>27</b>	16	5	6	
양 천	<b>279</b>	26	109	131	13	<b>27</b>	25		2	
광 진	<b>205</b>	21	116	56	12	<b>26</b>	19	7		
영등포	<b>218</b>	22	101	71	24	<b>17</b>	5	3	9	
마 포	<b>181</b>	32	59	60	30	<b>14</b>	11	3		
동대문	<b>222</b>	26	92	96	8	<b>13</b>		7	6	
송 파	<b>325</b>	31	127	145	22	<b>12</b>	5	3	4	
도 봉	<b>282</b>	20	89	165	8	<b>11</b>	9	2		
강 동	<b>222</b>	19	110	89	4	<b>8</b>		7	1	
서 초	<b>147</b>	20	53	60	14	<b>7</b>		3	4	
중 구	<b>51</b>	16	9	10	16	<b>4</b>	3		1	
종 로	<b>69</b>	24	22	9	14	<b>3</b>	2			1
용 산	<b>97</b>	16	38	27	16	<b>2</b>	2			
강 남	<b>166</b>	35	66	55	10	<b>2</b>	1	1		

○ 서울시가 인센티브 사업에 포함시키겠다는, 사실상 강제 종용조치가 취해진 다 음의 변화는 서울형 어린이집 IPTV설치사업이 사실상 어떤 성격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 3> 서울형 어린이집 IPTV 자치구별 신청현황

자치구별	신청현황		
	2009. 4.	2009. 11.	2009.12
총계	107	696	725
종로	-	3	3
중구	4	4	4
용산	-	2	2
성동	20	31	31
광진	3	26	26
동대문	8	12	13
중랑	10	39	58
성북	1	59	59
강북	4	42	42
도봉	-	11	11
노원	9	43	45
은평	4	32	32
서대문	2	27	27
마포	13	14	14
양천	-	27	27
강서	4	34	35
구로	-	97	97
금천	7	78	80
영등포	-	14	17
동작	-	43	43
관악	-	30	30
서초	7	7	7
강남	1	2	2
송파	4	12	12
강동	6	7	8

- 특히 11월 공문하달 이후 불과 15일여 만에 신청어린이집이 39개소가 늘었는데, 신규 신청한 자치구가 대부분 금천, 강서, 노원 등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이다. 이는 서울시가 사실상 인센티브 사업임을 내세워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에 IPTV사업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 이와 같은 서울시의 IPTV사업의 문제는 비단 서울시의 강제성 사업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녹화되는 개인정보의 당사자인 원생들과 부모들의 동의절차는 배제했다는 사실이다. 서울시 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부모들이 좋아하는 사업인데, 물어볼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지만, 개인정보 제공의 당사자인 원생과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 아이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안심보육이다

## -서울시 신임 구청장에 대한 서울형 어린이집 IPTV 정책 철회 요구 및 부모 소송 계획-

지난해부터 서울시내 소위 서울형 어린이집에 설치되기 시작한 IPTV가 서울시 및 관할 구청의 독려에 힘입어 지난해 말에 380여 개소가 설치완료 되었고, 설치 준비가 끝난 곳도 수백 곳에 이른다.

서울시가 안심보육의 유일한 정책으로 제시한 IPTV 설치사업은 사실상 지난 2006년 여론에 밀려 사라진 보육시설 CCTV 설치사업에 다름 아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쁘다. 음성녹음과 영상의 디지털 저장 및 전송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에게 지급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있다면 장소를 불문하고 접속가능하다. 한 부모가 IPTV를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를 통해 접속한다면, 사실상 방송 중계와 다름없는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부모와 보육교사, 그리고 정보인권을 고민하는 단체들은 지난 5월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의 IPTV 설치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그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제기와 중단 요구에 대하여 서울시와 사업자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일선 보육시설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모든 서울형 어린이집에 IPTV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IPTV 설치를 여전히 중용당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서울시는 보육시설 IPTV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겨놓고 개인정보 관리 감독 문제에 대하여 뒷짐을 지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녹화 및 녹취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기간을 어떻게 제한하며, 관리감독자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조차 서울시는 갖고 있지 않다. 아동의 신체적 모습과 더불어 이름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대화내용을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사업을 공공 정책의 이름으로 시행하면서, 그에 대한 관리감독은 나몰라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서울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어떻게 특정한 사업자를 독점적으로 지정하게 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 특히 우리는 서울형 어린이집 IPTV를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SK브로드밴드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인터넷으로 전송하면서 그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다. 이는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도록

한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이 보육시설의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폭넓은 보육시설의 책임을 사사로운 시시비비의 대상으로 삼을 뿐 예방적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안심보육은 사후방편으로서가 아니라 예방적 환경 속에 이루어지고, 교사와 부모가 상호 신뢰하는 보육환경 속에서 달성되는 목표이다. 보육교사와 아이들은 몰래카메라로 들여다보는 관리대상이 아니라, 자발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오늘 여기에 모인 보육교사·부모들과 제 단체들은 함께 「서울형어린이집 IPTV 철회를 위한 부모·제단체 모임」을 결성하고 그 첫 활동으로 구로구청에 위법한 IPTV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 모임은 향후 서울 모든 자치단체장과 의회로 요구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우리 모임과 부모 소송인단은 서울시와 각 구 의회에도 감사를 청구하여, 서울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특정한 IPTV 업체를 지정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도 투명하게 밝힐 것이다.

이번 6.2 지방선거의 결과는 보육교사와 아동의 정보인권을 침해한 오세훈표 서울형 어린이집의 인권침해에 단호히 맞서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당선인들에게 요구되는 책무임을 보여준다. 새로 당선된 신임구청장에게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위법한 어린이집 IPTV의 설치를 즉각 중단하고 기설치된 장비를 모두 철거하라!

2010년 6월 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